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 Ⅱ-1)



배경



“

면허 및 자격 근거가 없는 진료보조인력의 독자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1차 목록을 선정함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PA는 국토에 비해 부족한 1차 진료의사 및 지역적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되어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진료보조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 교육 또는 별도 채용을 통해 활용되다가, 전공의 수급 부족의 지속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에 따른 경제성 및 편의성 등으로 양적 수의 증가와 함께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연구한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양성되는 별도의 직역 제도인 **PA 제도는 필요치 않으며, 환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과 함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감시** 및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최근 모 대학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사태 등 현행 법령에 면허 및 자격의 근거가 전혀 없는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우선 근절대상 1차 목록**을 선정함.

대한의사협회 주요 논의 경과



2018.
12. 28(금)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01. 21(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02. 21(목)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9.
03. 18(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019.
04. 02(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04. 30(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차 근절 대상 목록 확정)

[2차 의정협약]

2014년 3월 16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2차 의정 협의결과 중
: 정부는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첫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둘째.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셋째.

의사 교육 및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1)

1.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2)

2.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 (3)

3.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 지금 신고하세요!

KMA 콜센터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

1670-5223

- 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예) 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 ②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 ③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예) 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추후 추진내용

- ①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②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조사/사법기관 고발** (사안에 따라 6개월 계도기간)
- ③ 2차 근절목록에 대한 논의 시작
 - 26개 전문학회 의견 수렴, 2차 근절목록과 진료보조인력 업무 명확화 논의